

윤석열 조준한 추미에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검찰무마 조사중”

법사위 첫 전체회의서
“이첩 과정서 편법
무리 확인... 조치할 것”
검찰 무마 사건이란
별건으로 조사 진행



추미에 법무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과 관련, 추미에 법무 장관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대검찰청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검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검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 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검찰을 이끄는 검찰부장을 외부인으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검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월권이냐 법 위반이 있었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이승해 이미 검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 검찰부는 충분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며, 검찰부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예규에 마련됐다고도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검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검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검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사안을 ‘검찰 무마 사건’이라는 별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바로 대검 검찰부에 확인을 한 바가 있다. (대검 검찰부로부터) 장관의 뜻을 명심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잘 명명했다시피 ‘검찰 무마 사건’이 벌어져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를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출입 기자단에 ‘한명숙

수사’ 관련 진정 처리 경위를 재차 설명했다. 대검은 이 사안의 경우 징계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검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진정인이 해당 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부가 이 진정 건을 처리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8년 7월 대검에 인권부가 설치된 이래 대검 인권부는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300여 건을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차기 통일부 장관은 누가?

민주 “외교·안보라인 쇄신”... 이인영·임종석 거론
“北 소통 위해 교체 필요...관료·학자보다 정치인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여권 내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대목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강경기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면적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차기 통일부 장관부터 관료·학자보다는 정치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18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이상호 의원의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조명균, 2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모두 관료, 학자 출신이었던 만큼 정무적 감각을 가진 정치인 출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당내 외교통인 한 의원은 뉴시스에 “북한과의 새로운 소통을 하기 위해선 오히려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관료나 교수는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86·운동권 대표 주자인 이인영 의원은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GT계)로, 지난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를 지냈다. 지난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민통선 통일걷기 행사를 갖는 등

남북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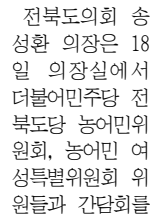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는 지난 총선에 불출마한 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전대협 3기 의장 시절 대학생이던 임수경 전 의원 남북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상호 의원은 20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2019년 개각 당시 입각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이혜찬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만류해 고사했다.

다만 우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적임자가 아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가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인사들이 남북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만큼 입각이 현실화될 경우 그간 한미 공조를 우선했던 기조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보다 무게를 실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를 하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시스

송성환 도의회 의장, 코로나19 농어민대책 간담회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18일 의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 농어민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내 농산물 생산과 유통, 현장에서의 어려운 문제점과 농산물 피해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김상민 농어민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전북도의 농업정책은 대농이나 부농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며 “소농을 위한 정책 확대뿐만 아니라 부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지원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바로마

켓은 농가당 연 매출이 1억원에 달한다”며 “전북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는 도민 외에는 알 수가 없는 만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품장터나 마켓 개설과 같은 푸드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민이 원하는 것은 농산지를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은 정치권이든 농업정책의 우선 순위는 농산물 유통을 위한 판매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며 “도내 농산물 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최기영 과기부 장관 “코로나19 국산 백신, 내년 하반기에 나올 듯”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착수... 1~2개월 소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백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당정 간담회에서 우

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시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백신의 경우 우리나라가 사실 약간 뒤져있는 편이긴 하다”며 “우리 나라에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아마 미국이나 유럽, 영국에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거쳐 입증이 공개적으로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고 그 임상시험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며 “임상실험은 아마 빠르면 1~2개월 (걸리고) 효과가 좋다면 이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영명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제7회 전주한옥 품바명인전

2020년 6월 27일(토) 오후 7시
전주 중남문 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 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 원 |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JJC(지방자치TV)전북총국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3-9700